

# '내·외·산·소' 붕괴 위기, 복지부 20년 실패의 결과물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필수 의료에 대한 약 20년 전 기사를 찾아보면 근래 보도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그때부터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서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 과목 지원자가 줄기 시작했고,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과목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유도 지금과 다를 바 없다. 산부인과 등은 저출생 현상 시작으로 수입은 줄고 의료사고 위험 등 업무 부담은 과중해져서, 피부과·성형외과 등은 일하기 편하고 고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필수 의료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풀기 시작한 이슈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의료인 수급 정책, 건강보험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몇 번 시도했지만 의사들이 과잉으로 강력한 장벽 쌓기를 해서 어려웠다고 치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사들 주장의 핵심은 의사 총량이라 아니라 의사 배분이 문제이니 먼저 필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사고 부담

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가 그동안 가만있었던 것은 아니다. 복지부 보도 자료 코너에서 '필수 의료'를 검색하면 지난 2015년 이후에만 50건 가까이 필수 의료 문제에 대응해 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수가를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손보지 않고 전공의 수련 보조 수당을 50만원, 100만원 올리는 것 같은 짝퉁 짝퉁 대책을 내온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의료 상경'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간단한 말들이지만 한

복지부, 수가 높낮이 조절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가졌지만 전체 의사 수입은 늘리면서 필수 의료는 엉망으로 만들어

나하나에 국민들의 큰 불편과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담겨 있다.

수가를 올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보건 의료 인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연평균 수입은 2억3070만원으로, 지난 10년간 보건 의료 직종 중 가장 빠르게(연평균 5.2%) 증가했다. 이 같은 의사 수입은 기준에 따라 좀 더 크긴 하지만 구매력 평가(PPP) 환율 기준으로는 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주요국에선 의사 수입이 간호사의 두세 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5배 이상 수준인 것도 참

할 만하다. 복지부가 수가 협상에서의 사들에게 휘둘리면서 전체 의사들 수익은 크게 늘려놓고 정작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는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수치도 없다. 이런 조건이 의대 입시 열풍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필수 의료 의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확실하다. 심장 수술이 나 뇌 수술의사는 연봉이 10억원 안팎, 심혈관 수술 의사는 7억~8억원 수준으로, 일반 내과 의사(3억원 남짓)의 두세 배라고 한다. 어려운 수술을 하는 의사는 그만큼 가치를 인정해 주고 보상이 따르니 전공의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우리도 진작부터 이런 구조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복지부의 수가 조절 정책이 어느 정도라도 작동했으면, 필수 의료 분야는 올려주고 수가가 필요 이상으로 높은 분야는 억누르는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면 어땠을까. 필수 의료 의사들이 못 하겠다고 하는 일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할 명분도 현저하게 줄었을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야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 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을 왜 지난 20년 동안 게을리했는지 궁금하다. 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한마디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

김준의 맛과 섬 [161]

## 신안 바위옷 목무침

'돌팍웃'이나 '독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위옷이라는 이름을 듣고서도 고개를 가우뚱했다. 돌팍이나 독은 돌을 이르는 전라도 말이다. 바위옷은 깻바위를 옷처럼 덮고 있는 해초의 일종이다. 그 바위옷을 끊어서 만든 목이 바위옷목이다. 맛이 궁글해 물어보자, '맛있어요. 기가 맥허부러'라며 침을 삼켜가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올렸다. 맛뿐만 아니라, 작명 또한 기가 막힌다. 먹물 좀 먹은 사람들은 '바위이끼'를 상상했을 것인데, 신안 섬 주민들은 거침없이 '독웃'이라 했다. 여름에는 깻바위에서 바위옷을 끊을 수 있지만 겨울이면 바위에 붙어 채취할 수 없다. 여름도 물이 많이 빠지고, 해가 날 때가 좋다. 옛날에는 전복이나 대합 등 패류 껍데기로 바위를 긁어 채

취했다. 게다가 깨끗한 바위를 찾아다녀야 하기에 무인도로 가는 일이 많다. 채취하는 과정이 수고스럽다.

물에서는 도토리, 제주나 남해에서는 우뚝가사리를 이용해 목을 만들어 잔치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내놓았지만 깻벌이 발달한 섬에서 쉬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위옷이라. 옛날 섬마을에서 사위보다 더 귀한 손님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실 때 내놓기도 했다. 바위옷은 물질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산속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 깻벌이 발달한 섬마을에서 목을 만들 수 있는 안성맞춤의 재료다. 우무나 도토리목에 비해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고 탱글탱글하다.

목이 그렇듯이 바위옷도 손이 많이



간다. 채취한 바위옷을 10여 번은 씻어야 한다. 그리고 햇볕에 잘 말려서 보관한다. 갈무리해 놓은 바위옷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약한 불에 두어 시간 끓인다. 그다음 체나 망으로 걸러낸 후 저어가면서 다시 끓인다. 통이나 틀에 넣어두고 식하면 두부처럼 응고된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참기름과 파를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 끼얹어 먹는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식재료를 보존하고 지역 음식을 지키는 국제 슬로푸드연맹의 프로젝트인 '맛의 방주'에 등재되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양대 노총 회계 공개, 정부가 원칙 지키니 바로잡히는 것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조합이 조합원에게 회비를 걷는다면 얼마를 걷어 어떻게 썼는지 알리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유독 노조들은 이를 감춰왔다. 뭔가 구린 곳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회계 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두 노총은 "노동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무슨 탄압인가. 몇몇하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노조 저항에도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추진해나가자 결국 손을 들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각각 100만명이 넘는다. 매년 걷는 조합비가 각각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정부 지원금까지 받고 있다. 그동안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었다. 불법 집회·시위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일부 간부가 비리를 저지르는지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 노조 회계는 일부 노조 간부만 아는 비밀이었다. 어떤 조직이든 투명한 회계 관리는 민주적 운영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노총들이 상식을 되찾아 회계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물론

아니다. 정부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에 반발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한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받아들여기로 한 것이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노조 병폐는 말 그대로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 양대 노총 산하의 거대 노조만큼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곳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2012~21년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가 38.5일로 일본(0.2일)의 192배에 이를 정도다. 영국(12.7일), 미국(8.8일) 등 다른 주요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조 본연의 활동과는 무관한 반미·반정부 정치 투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강경 투쟁과 불법 파업, 폭력, 갑질, 회사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 정치 파업, 무분별한 집회, 고소·고발·진정 남발 등도 우리나라 거대 기득권 노조의 고질적 병폐다. 노조 병폐를 바로 고치기는 힘들다. 정부가 이번처럼 원칙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나가야 한다.



### 여야 비난 팻말 고성 야유 없기로, 모처럼 신사협정 지켜지길

여야가 국회에서 상대방을 향해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비난 팻말을 들거나 부착도 안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데 공감, 이 같은 실천 방안엔 합의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대신 상대방을 향한 야유와 피케팅은 계속 늘어왔다. 특히 지금의 21대 국회는 '막장 국회'로 불려왔다.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연설 때 "땅, 땅, 땅" "땅 대표"라고 계속 소리 지르며 연설을 방해했다. 탈북한 국민의힘 의원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의원도 있었다. 이런 고성 지르기, 야유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상임위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 비난 팻말을 부착하면 그보다 더한 팻말을 써서 반격하는 게 일상이 됐다. 한노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화천대유=아빠의힘 게이트, 50억이 산재위

로금' 팻말을 부착하고 대치했다.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여야 지지율이 동반 하락, 지지 정당인 없는 무당파(無黨派)가 제1당이 됐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의 전례를 보면, 이 같은 신사협정은 대체로 오래가지 못했다. 여야의 정쟁이 다시 격화되면, 강경파에 의해 언제든지 구태가 재연될 수 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야유하는 의원은 자정모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모처럼 국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여야 합의를 국회 밖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에 내걸었던 정쟁성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지난해부터 상시 허용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자 취한 조치였다. 민주당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의 현수막은 '팩트'라며 여전히 걸어 놓고 있다. 국회에서 상대방을 향해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고 팻말도 들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국회 밖의 현수막도 모두 철거했으면 한다.

### 지옥 같은 북송 또 1000여 명 대기 중, 유엔에 호소해야

북 주민 일가족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로 귀순했다. 동해상 탈북은 2019년 11월 북 여민 2명이 삼척항으로 귀순했다가 문재인 정부에 강제 북송당할지 4년 만이다. 국제 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북·중 국경이 아닌 해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밀착에 따른 탈북자 단속 강화로 중국 등을 통한 한국행이 힘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전환기정의위김그룹과 북한정의연대는 '통일과나눔 재단' 긴급 콘퍼런스에서 8월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린 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탈북자 6200여 명이 5~7곳 세관과 변방대를 통해 강제 북송됐다고 밝혔다. 중국 변방대 등에는 아직도 1000명 넘는 탈북자가 북송 대기 중이라고 했다. 언제든 더 북송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송된 이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임신부와 영아도 있었다고 한다. 중국 측 호송 버스 승합차에 실려 북에 넘겨지면 북한 보위부로 이송된다. 가혹한 고문과 조사가 기다리는 곳이다.

북한정의연대 등은 북이 이들을 발거시켜 체벌하고 7~9명 감방에 50명 이상을 수감한다고 했다. 물과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가혹 행위와 고문을 하는 등 지옥 같은 환경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한국인·교회 등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즉결 처형한다고 했다.

중국 내 탈북자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일대 감옥과 구류장에는 잡혀 온 탈북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강제 노역까지 한다고 했다. 북한이 탈북자 일가를 몰살하고 브로커도 처형한다고 협박하는 통에 중국 도강(渡江) 비용이 10배나 뛰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탈북 브로커 단속 강화와 일부 사기 행각 때문에 태국·라오스 등으로 가는 남방 탈북 경로는 사실상 끊겼다.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생명 줄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채택할 북한 인권 결의안에 탈북자 강제 송환 반대를 명시해 중국이 함부로 탈북자를 송환하거나 단속·구금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중 관계를 강화해 대중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이 스스로 가입한 난민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 재외공관의 탈북자 보호 지침을 정비하고 탈북 경로를 되살릴 민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 '중도팔이' 매체에게 묻는다... 윤석열 자유주의 어디에 '극단'이 있나?

뉴데일리 newdaily.co.kr

도대체 누가 '극단'인가? | '기회주의 중간노선' 對 '선명 자유노선' | 정당성·패권 상실 겁나서 그러는가?

### □ 세상이 뒤집혔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 [자유]의 이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 ▲ 그렇게 보이는 사람 ▲ [자정 진보] 메뚜기 한 철에 감히(?) 아니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세상이 되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 윤석열 대통령 팀이 지금 그렇게, 전방위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 [좌익]의 공격과 [내부총질] 뿐만 아니다.
- 기회주의 중간파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 것은 중도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탓"이라며, 윤석열 [자유 이념]의 승리를 꼭 괴렸다.

좌익은 의례 그렇게 하게 돼 있다.

### □ 왜 입에 거품 무나?

그러나 기회주의 중간파와 그 매체(媒體)들은 왜 [이때]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 오만하다, 소문하다 ▲ 이념은 치위라 ▲ 극단 정치 하지 말라 어찌고, 일제히 거품을 물까?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은 물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부·사법부·행정부(장·차관 뺀) 언론·노동·문화 등 각 부문의 시대(時代) 교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려 했던들 뭘 마음껏 펼 수 있었겠나?

- ▲ 노태약 선관위 ▲ 한상혁 방북위 ▲ 항명 경찰 ▲ 공명방송 가짜 뉴스 ▲ 유창훈 하는 것 못 봤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기회주의 중간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대한민국 정통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려 한 건, 사실이다. 문재인 5년과는 정면으로 대척적인 정치·외교·경제·노동·교육 정책을 펼 것도, 사실이다. 이게 잘못됐다, 이건가?

### □ 윤석열 주도가 못마땅한가?

거거였다. 기회주의 중간파와 그런 매체들엔, 윤석열 대통령의 [전투적 자유노선]이 심히 ▲ 불편하고 ▲ 거북스럽고 ▲ 못마땅했을 것이다. 왜?

그들 기회주의 중간파가 지난 5~7년 동안 살아온 방법은,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 ▲ 바른미래당을 띄워주고
- ▲ 이준석 유승민을 밀어주고
- ▲ 자유·보수 우파로 보일까 전전긍긍하고,
- ▲ 양비론과 기계적 중간을 논(論)하고
- ▲ 좌익 세태에 반쯤 저추고 들어가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자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들처럼, 극좌와 싸우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할 것을 바랐을 법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5년]이 파괴한 자유의 [국가 정체성]부터 시급히 재확립하겠다고 했다. 기회주의 중간파와 그런 매체들은 당혹했을 것이다. 자기들이 제책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그렇기에 그들은,
- [윤석열 해계모니(주도권)]를 어떻게든 꺾으려 하고
-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들의 가두리 양식장에 몰아넣고 길들여하려 한다.

### □ '중도팔이'로 영향력 약화 막으려는가?

그들은 윤 대통령에게 [극단 정치] 하지 말라고 한다. 극단(extreme)은 나쁜 것 맞다.

- 그러나 누가 극단인가?
- ▲ NL 혁명 권인가? ▲ 윤석열 자유주의인가?

정답은 자명하다. 윤석열을 비롯한 한국 비(非) 좌파가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 = 극단 하자고 한 사례 봤나? 그건 [극좌 운동권]이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좌파 파시즘]이다. 또 하나의 미신(迷信).

### ▲ 고물가 ▲ 고금리 ▲ 퍼주기 삭감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다고?

- △ 문재인 부동산 정책 파탄
- △ 퍼주기로 인한 국가 부채 급증
- △ 소득주도성장 윤문 등 [반(反) 시장]이 망친 민생이었다.

이걸 다시 [사정]으로 회복하진나 쉽게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했다서 경제가 나빠졌다 할 수는 없다. 건강부회(健康會)로 [중도 팔이] 하지 말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칼럼 더보기 ▼

유시민이나 유시민, '알싸고 버티기' 그만하라... '반핵·진보' 내세우면 다인가



조명현 공의 재보자 등장, 감동적이다... 김문수 정치 표·경호도 그렇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10월 21일 게재 되었습니다.

